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가. 개요

- 대주제: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와 혁신
- 일 시: 2022. 12. 9.(금) 13:00~17:3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이달곤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 주 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 세션 1

[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

- [사 회] 배창현 교수(강릉원주대학교)
- [발표 1] 국가회계 현황과 과제(김완희, 가천대학교)
- [발표 2] 지방회계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역할 강화(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발표 3] 정부회계 정보시스템의 회고와 미래(박정수, 씨엔에프시스템)
- [토 론] 김동욱 교수(제주대학교), 김철희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엄태호 교수(연세대학교), 최우성 팀장(행정안전부)

• 세션 2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

- [사 회] 박상연 교수(배재대학교)
- [발표 1]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정도진, 중앙대학교)
- [토 론] 김완수 팀장(기획재정부),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세션 1. 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국가회계 현황과 과제(김완희 교수, 가천대학교)

국가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성인지 결산서,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통합결산서의 공시량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가재정 전반의 종합적 파악과 성과 중심의 체계적 재정운용을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통합 정보와 자동검증 기능에 따른 자산·부채 정보가 산출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국가재정 전반의 종합적 파악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회계보고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보고서의 활용도도 낮아 성과 중심의 체계적 재정운용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막연히 축적해 온 회계정보가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10년간 자료를 분석 결과,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자산의 연도별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시적인 자산재평가가 데이터의 일관성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와 사회기반시설의 복구충당부채는 현재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축적해 온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낮으며, 이를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제·개정 관련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체계화 등은 개선된 부분이나, 재무보고 총평(제15조) 관련 국가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퇴행된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역시 제·개정 내용이 거의 없어 개선사항을 찾기 어렵다.

정부회계 연구의 최근 10년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학, 공기업 및 공익법인 등 연구 대상이 다양해지고 실증연구가 증가했으나, 연구는 대부분 정책연구용역에 치우쳐져 있고 후속연구 연계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재정부담 세대(누가), 지출대상과 항목(무엇을), 지출장소(어디서), 지출목적(왜) 및 지출수단(어떻게) 등을 중심으로 재정의 회계 책임성에 대해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책집행자, 정책수립자별로 상이한 정보 활용 목적에 맞는 맞춤형 국가통합결산서 산출이 필요하며, 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등 회계실체 범위를 확대하고, 충당부채의 인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 국회예산정책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국내 전문기구와 IPSASB 및 OECD 등 공공회계 국제기구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 토론 내용

김동욱 교수(제주대)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분석을 통해 내용연수 정보의 비일관성을 확인했듯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성수대교 사고 등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감가상각을 포함하고, 자산재평가 등의 국가와 지방회계의 상반된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교육에는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회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디브레인(국가)이나 e-호조(지방) 관련 데모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022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2022. 12. 9.,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철희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회계의 경우, 조례 등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의 결산이 차년도 하반기에 승인되어 최근의 결산 정보 활용이 어려우므로, 예산 활용의 적시성 증진을 위해 자치법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가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보조금으로 관리되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별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 회계시스템상의 개정과목 동일화가 필요하다.

엄태호 교수(연세대)

현재 디브레인(국가) 데이터는 비공개이고, 지방회계 데이터도 지방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다.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회계 데이터의 접근성이 증대되어야 하며, 지역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우성 팀장(행정안전부)

회계데이터의 신뢰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나, 올 상반기에 공유재산 기준을 제정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므로, e-호조와 새올행정시스템상 데이터의 정합성이 증진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완희 교수(가천대)

민간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으로 발생주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하다.

신유호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별 회계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주민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겠으며,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세션 2.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정도진 교수, 중앙대학교)

현재 국가결산보고서가 당면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이 낮다. 결산보고서의 분량이 방대하고,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의 구성 또한 복잡하다.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이해와 접근성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훼손하므로, 국민의 이해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발생주의 결산정보의 활용이 낮다. 재정상태표는 연금충당부채 추정 등에 일부 활용되나, 재정운영표 등 다른 재무제표는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한 유동·비유동의 자산 분류 등 기업회계와 국가재정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민중심 결산보고서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고자하는 목적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상태표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산·부채 분류 체계인 유동·비유동 구분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유용성이 낮다. 따라서 금융자산(정부출자금 등), 유·무형자산(사회기반시설 등), 차입부채(국채 등), 충당부채(연금충당부채 등) 및 사회보험부채와 같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보다 유용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주석을 적극 활용하여 자산·부채 계정과목을 대폭 축소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 중요한 충당부채 등을 구분·표시하여 중요한 미래 지출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순원가를 분야별 순원가 공시체계로 전환하여 15대 예산분야와 직접 연계된 분야별 순원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과 비용(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성하여 주 재무제표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표의 이해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을 높여 유용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재무제표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국가재정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국가재정 현금흐름의 집행과 조달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작성범위를 확대하여 재무제표를 간소화하고, 세부 정보를 주석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와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결산개요에 포함하여 회계보고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중장기 과제는 연계성, 적시성, 독립성 및 전문성의 강화이다. 예산 및 재정예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발생주의 결산체계는 적시성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예산에 따른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2007년 설치된 국가회계제도심의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독립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성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토론 내용

김완수 팀장(기획재정부)

국가회계 재무제표는 국가 자산·부채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이며, 체계적으로 국가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잠재부채의 개념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재정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국가결산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간소화된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산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 결산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국가결산체계와 관련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산보고서 전체의 관점에서 국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인지 혹은 재무제표 결산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현금흐름표와 비교하여 보다 단순화된 대안적인 현금흐름표가 필요하다.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중심의 국가결산체계 개편 방안이란, 생산한 회계정보를 어떻게 수요자 중심의 재무보고체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지금까지 구축 자체에 초점을 맞춰온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투명한 소통의 통로로 탈바꿈하는 원형이 될 것이다. 국가결산체계 개편 방안이 실제로 법제화되고 디브레인 시스템에 반영되어 모든 정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국가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연식 교수(경희대)

결산 보고의 방향이 국민중심이라면, 결국 발생주의 국가 결산정보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지게 되는 재정책임 보고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내 정책 당국자들 및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부회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학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회계기준 제정의 실체와 회계보고의 실체는 같다고 보인다. 이것이 과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기반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 제정기관과 회계제도 운영 주체를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2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2022. 12. 9.,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